

“남북 정상회담
盧 재임중 해야”
김대중 前 대통령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15일 6·15 남북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나는 결국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본다”며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정상회담을 해야 다음 정권도 계속 하게 된다. 여기서 맥이 끊어지면 다음도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캐디
단체결성권 부여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앞으로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단체를 결성해 사업주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中國자본 1조5천억원
무안기업도시에 온다

전남도·무안군 - 中 8개 대기업 투자협약 체결

중국 대기업들이 무안기업도시에 16억 5천만 달러(1조5천3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Table with 2 columns: Investment Category, Amount. Includes IT 산업단지 (2억달러), 자동차부품단지 (3억달러), 명품 아웃렛 (4억달러), 국제 회의센터 (5억달러), 의료·한약단지 (2억달러).

산동성 삼북병원유한회사와 의료법인 운양 의료재단이 한중 종합의료단지 건설에 1억 5천만 달러, 제남행림생물기술유한공사와 Brain Group이 한약재표준화유통단지 건설에 1억 달러를 각각 투자한다.

주할 경우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투자유치는 전남도와 무안군이 한국과 중국의 젊은 기업가 모임인 ‘한·중 청년기업가 서밋(SUMMIT)’을 유치하면서 무안기업도시 등 전남도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와 매력적인 투자환경 등을 적극 홍보해 이뤄졌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영암군·대한조선(주) 투자양해각서(MOU)체결식 2007. 6. 15. 대주그룹(회장 허재호) 계열사인 대한조선 박재영 부회장(왼쪽 네번째)이 15일 영암군청에서 김일태(왼쪽 다섯번째) 영암군수와 선택용 블록제작 전문업체인 대한중공업 공장 준공 및 향후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靑-李 ‘검증 배후설’ 법정다툼 비화

靑, 李측 대변인 고소... 李 맞고소 검토

한덕수 총리는 15일 오후 여수세계 박람회 후보지 및 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건설현장을 시찰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겨냥한 범여권의 과장공세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한 이 전 시장측 대변인을 검찰에 고소하고, 이 전 시장측이 맞고소를 검토함에 따라 양측간 검증공방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관위 3차 고발 및 검찰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나서면서 대선정국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캠프의 좌장인 이재오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고소를 하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맞고소를 비롯해 모든 준비를 해 왔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투쟁을 원하면 투쟁을, (청와대에서) 결번 가는 대로 응해 주겠다”며 맞고소 방침을 시사했다.

시설

노인학대 68%가 친자식 행위라니...

노인학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광주·전남 노인학대 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는 354건에 이른다.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노인학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몸이다. 병원비 등 부담비가 부담이 되어 늙은 부모를 망설이게 되고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노인일수록 학대를 더 많이 받는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대선후보 검증 정치공방으로 안 된다

대선 후보 검증 공방이 폭로전을 넘어 맞고소전으로 비화하고 있어 안타깝다. 청와대는 ‘검증 배후설’을 제기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 전 시장 측은 청와대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의혹은 반드시 검증해야 할 대상이다. 대선후보의 과거 행적이나 이력, 재산형상과정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

靑·전발언 12년만에 분리

전남발전연으로 새롭게 출범
靑주발전연은 내달 법인 신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원이 출범 12년만에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관·규정에 따르면 이사 수를 기존의 3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축소하고 당연직 이사 5명은 전남도 소속으로 개편됐다.

빛日만평

- 김중두



국민이 기가 막혀...

“시민사회협약 규정없어 단체 난립 우려”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위 토론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된 시민사회협약제도의 규정 미비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난립과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나아가 “광주시의 조례안에 나온 시민사회협약제도는 체결 당사자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유사 시민단체들의 대립, 각종 시민사회협약의 남발 등으로 적지 않은 부작용을 예상한다”며 “시민사회협약 체결당사자 조항에 요건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치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website, and subscription rates.